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1개월 연기

동반위, 내부의견 조정 시간 필요 ... 서브원은 MRO 가이드라인 위반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한달 정도 연기한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심이 모아졌던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2013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위원회는 12월27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합의 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품목은 중소기업자 사이의 내부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으로 서둘러 심의해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제과업과 관련해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계형 또는 대기업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며 “특히, 큰 상호를 지닌 기업들이 중소 제과업을 도와주는 방안이 구체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실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제조업 16개 및 서비스업 26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과 더불어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조사 결과와 2013년도 위원회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11월5일부터 30일 동안 MRO 대기업 10사와 MRO 관련 중소 유통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중소 유통기업과의 거래관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중소 유통기업은 자발적 감시활동 등이 미흡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LG그룹의 MRO기업인 서브원은 가이드라인 영업범위 제한을 위반해 제조기업 직거래 현황과 PB 등 저가제품 유통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정조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3년에 동반성장 지수 참여 대기업을 현재 74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산업과 업종 선도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이외의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금융과 의료 등 비제조업으로도 외연을 넓힐 계획이며, 2·3차 협력기업에게도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에 더 많은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부터 동반성장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하반기부터는 동반성장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7>